

與 혁신위 “비례대표 절반 청년으로”… 지도부는 2호안 ‘함구’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

3호 혁신안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정부기구·지자체에 청년위원 참여 반발 우려에 “더 큰 대의… 극복해야”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9일 ‘3호 혁신안’으로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 우세 지역의 청년 전략지역구 선정, 정부 기구 및 지자체의 모든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1호 혁신안으로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한 징계 해제, 2호 혁신안으로 의원 정수 축소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최안나 국민의힘 혁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키워드는 ‘청년은 우리의 미래다’로, 능력있는 청년들이 당에 와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확실한 실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3가지 안건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제시한 3호 혁신안 3가지는 ▲당선 가능한 순번에 청년 비례대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혁신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년 50% 의무화 ▲당선 우세 지역 ‘청년 전략 지역구’ 선정 ▲전 정부 기구 및 지자체 모든 위원회 청년위원 일정 비율 참여 의무화 및 확대 등이다.

최 혁신위원은 청년 비례대표 50% 의무화에 대해선 “첫 번째로는 미래 세대를 생각했을 때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당선 우세 지역에 ‘청년 전략 지역구’를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두 방식 모두 공개경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할 것이고 공개오디션 등 방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정부 기구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에 청년위원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시행규칙을 개정하도록 혁신위가 당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안건을 내놓은 이유는 정책 결정과 청년들의 이야기를 더 지속 가능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우세 지역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선정하는 것은 45세 이하 청년들만 공개 경쟁할 수 있는 ‘청년 공개 경쟁 특별 지역구’를 선정해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김경진 혁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경선을 통해 선출된 우리 당 후보가 본 선거에 나가 당선되면 지역구에서도 청년 의원이 많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취지”라고 부연했다.

혁신위에서 언급한 ‘우세 지역’은 국민의힘의 ‘뒷밭’으로 불리는 영남·서울 강남권 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우세 지역이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경우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 혁신위원은 “구체적인 지역구 선정과 관련된 숫자 기준은 공천 관리위원회와 총선기획단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세 지역’을 청년들만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존 현역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 혁신위원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더 큰 대의는 청년들이 현실정치에 와서 목소리를 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는 것이고, 당내 소소한 반발과 이견은 혁신 과정에서 극복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했다.

김 혁신위원은 “당헌당규 상 청년은 45세 미만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5세 미만 유권자가 대략 37~38%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

면 그 청년 유권자의 비율을 상응하는 정치인이 있는 게 적합한데, 현재 우리나라 청년 국회의원 수는 4% 남짓에 불과하다”고 ‘청년’ 중심 혁신안을 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위는 3호 혁신안을 내주 예정인 당 최고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올릴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20%를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을 9일 당 지도부에 보고했으나 해당 혁신안과 함께 권고사항으로 거론된 당 지도부·중진·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협지 출마 요구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앞서 혁신위는 2호 혁신안 키워드를 ‘희생’으로 잡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현역 국회의원 평가 하위 20% 공천 원천 배제 등을 제안한 바 있으며, 덧붙여 권고 사항으로 당 지도부·중진·대통령과 가까운 의원들의 불출마나 수도권 협지 출마를 요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김포·서울 편입에 맞불?... 민주당, 경인선 지하화 추진

주민들, 소음·미세먼지 등 고통 호소 재개발 지연에 슬럼화 계속 진행 구로·인천·부천 시민 자족도시 재탄생

더불어민주당이 9일 서울에서 인천을 잇는 철도인 경인선을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장은 “도심 한 가운데 놓인 경인선은 지난 120년 동안 도시를 양분화해서 지역 생활권을 단절시키고 균형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재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홍익표 원내대표. /뉴시스

면서 “주민들은 소음과 미세먼지 그리고 분진 때문에 고통을 호소해 왔으며, 철도 주변은 재개발이 지연됨으로써 건축물의 노후 등으로 슬럼화가 계속 진

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경인선 지하화를 통해 구로에서 인천까지 이어지는 구로 테크노밸리, 인천 클러스터 벨트

의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005년 경의선이 지하화되고 2016년 경인선 숲길이 조성되자 방치되고 낙후됐던 철길은 소통과 문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경인선 지하화는 지상의 부지를 개발시키고 녹지화해 구로, 인천, 부천 시민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자족도시로 재탄생 할 것”이라며 “관련 6개 지자체 주민의 건강, 환경, 주거권을 개선시키고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상권 활성화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경제를 살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장은 “민주당은 총선을 대비해 국민의 삶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면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 일상을 바꿀 수 있는 정책, 성장과 화합을 보호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인선은 사업비가 6조~8조원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재원 마련 방안이 관건이다.

이에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이었던 수도권 지상 철도의 지하화를 위해 마련한 특별법을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이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野,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발의

방통위, 가짜뉴스·허위 보도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 내려 검사들, 범죄 혐의에도 처벌 안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가결될 시,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위는 즉시 정지된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 보도와 관련해 방송사 등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을 실패점검거

나, 가짜뉴스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로 보고 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한 논의는 의총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고발 사유 의혹에 휩싸인 손준성 대 구고검 차장검사와 최근 비리 의혹에 휩싸인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원래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고 했으나 간부급인 손 검사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만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회동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과 임홍석 차장검사에 대해서도 탄핵 여부를 논의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견은 없었다. 탄핵소추라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고 따라서 국회는 탄핵소추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거나 징계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고, 고발을 하더라도 수사

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 또는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위법한 범죄행위가 분명하고 비위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정치적 고려로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과 검사 2인의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본회의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도록 돼 있다.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 과반 찬성이기 때문에 과반 의석수를 점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박태홍 기자

“경영활동 크게 위축되고 산업현장 혼란 겪을 것”

>> 1면 ‘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서 계속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 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서예진 기자